

오늘의 주요기사

2023 4 11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의회

江原日報	19	[]	2	1
江原日報	04			2
강원도민일보	23			2
江原日報		[]		2
江原日報	21	[]		2
강원도민일보	03		318	3
江原日報	02	“道	”	3
江原日報	04		委 가	4
강원도민일보	04		' ,	4
강원도민일보	01	[]		5
江原日報	01	[]		5
강원도민일보	19	[]		6
원주투데이			,	7
강원도민일보	13		" "	8
江原日報	01	"	"	9
江原日報	01	“	”	9
江原日報	02		" "	10
江原日報	02	“	” 300	11
江原日報	02	“	”	12
江原日報	03	"	"	13
江原日報	03	"	"	14
江原日報	03	金 “	” ... 李 “	15
江原日報	03	‘	’	16
강원도민일보	03	33	' ' 3 ...	17
강원도민일보	07			2829
강원도민일보	03		' ' 70 가	18
江原日報	04			19

강원도민일보	04		2500					19
강원도민일보	14							20
江原日報	14		494			48		20
江原日報	10				3			21
강원도민일보	02	.				23% 가...	56	22
강원도민일보	19	[]						23
강원도민일보	19	[]	1	,				24
江原日報	19	[]		,	.			25
江原日報	19	[]	北	'	,			26

江原日報

2023 04 11 ()
19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봄이 찾아왔다. 나무에는 새순과 새잎이 돋아나고, 꽃들은 활짝 피어나고 있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새로 태어나는 출범 원

년이기도 하면서 강원도의 명칭이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는 여러모로 뜻깊은 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이제 6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무총리 주재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가 지난달 30일 강원도청에서 열렸다.

현재 정부 각 부처는 강원도가 제시한 137개 조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강원도정과 도출신 국회의원, 도의회를 비롯한 18개 시·군의회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열심히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몇몇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만큼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5일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안) 발표가 있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국, 1기획관, 11과, 5사업소 규모의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를 강릉에 설치하는 게 내용의 골자다.

강원포럼

권혁열 강원도지사



강원도청 제2청사 설치에 민선 8기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이자 지역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강원도의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춘천은 행정도시로, 원주는 혁신·기업도시 설치로 지속적으로 인구 수가 증가하는 반면, 영동권은 인구 감소와 더불어 발전이 더뎠다. 이와 맞물려 지

다. 금번 조직개편안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오로지 도민만을 바라보고 고민한 노력의 산물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그렇지만, 목표를 이룰 때까지 계속 나아갈 것이다.

현행 법령과 여러 여건을 감안해 본부급(2급) 3개국 규모의 2청사로 시작하지만 향후 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안착된다면 추가로 2개국 규모의 조직이 추가돼 총 5개국 규모의 부지사급(1급) 청사로 확장될 것이다. 강원도 제2청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도 제2청사 설치에 새출발의 상징

실현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다.

여러 공직자

역내총생산(GRDP) 격차도 영서권 약 20조원(62%), 영동·남부권 약 18조원(38%)으로 점점 벌어지고 있다. 또한 영동·남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문제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과 행정 편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2청사 개정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불편사항도 많은 부분 개선될 것이다. 강원도의회와 강원도는 지난 1년간 여러 현안에 대해 협치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 이번 제2청사 설치와 관련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

가 걱정하는 정주여건과 사무공간 개선을 위한 대책도 집행부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현재 강원도는 거대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은 도민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강원도의회가 앞장설 것이다. 새로운 강원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江原日報

2023 04 11 ()
04

강원 광복기념관 오늘 착공식
도 항일애국선열 추모탑 일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 기념식과 강원 광복기념관 착공식이 11일 오전 10시30분 강원도 항일애국선열 추모탑에서 열린다.

광복회 도지부가 주관하고 강원도와 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이날 행사는 임시정부가 갖고 있는 정통성과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강원 광복기념관 건립 경과보고, 헌화 및 분향, 기념사·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도지사,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신경호 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김진호 춘천시의장 등 내빈과 광복회원 및 유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준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4 11 ()
23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가 10일 대전DCC컨벤션에서 권혁열 사무총장과 시도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4 10 ()

[동정] 권혁열 강원도 의장

권혁열 강원도 의장은 11일 오전 10시30분 도항일애국선열추모탑에서 개최되는 제104주년 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석.

江原日報

2023 04 11 ()
21

◇ 권혁열 강원도 의장은 11일 오전 10시30분 도항일애국선열 추모탑에서 개최되는 제104주년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참석.



기념식에 참석.

2023 04 11 ()
02

江原日報

“도와 긴밀 협력 특별자치도 성공 동참”

강원도민일보

2023 04 11 ()
03

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오늘 개회

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가 11일 개회, 오는 25일까지 15일간 열린다. 4월 회기에선 올해 첫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된다.

이번 회기에는 5321억원 규모의 강원도 추경안 심의 등이 예정돼있다.

도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후, 도의회 현관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전부개정안 조기 통과 촉구 결의안을 낭독, 강특별 개정안 조기 입법을 위한 범국민·범도민 여론을 결집한다. 이설화

도의회 특별법 개정 촉구 힘 보태

강원도의원들이 강원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포럼에 동참하며 힘을 보탤다.

강원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강원특별법 특례 발굴, 추진 상황 등을 지원·점검하고 있고 향후 조례 제·개정 등에 나선다.

이날 포럼에는 김길수 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장(영월)과 김기홍 부의장(원주), 최종수 도의원(평창), 최재민 도의원(원주), 김용래 도의원(강릉), 박대현 도의원(화천), 전찬성 도의원(원주)이 참석했다. 도의원들은 ‘족쇄를 풀어라’, ‘권한 이양을 달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

고 강원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길수 위원장은 “오늘 포럼에서 환경, 산림, 군사, 농지 분야 전문가들이 제시한 발전 대안을 특별자치도 출범 과정과 의정 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며 “도와 긴밀한 협력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에 보탬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부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규제로 신음하던 도민 모두에게 감동과 새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실질적 규제 완화까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포럼과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붐업을 위한 기회에 앞으로도 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2023 04 11 ()
04

江原日報

도학교운영위 조례 개정 놓고 찬반 공방 가열

학부모 “본연 의미 잃어 손 봐야”
일각 “학운위 독립성 필요” 반대

속보=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위)를 강원도교육감 소속으로 편입하고 임원의 자격을 학부모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본보 10일자 4면 보도)되면서 찬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과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강원본부, 새싹부모회 강원지회,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강원지부 등으로 구성된 강원도학부모단체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조례 개정안을 지지했다. 도

학부모단체연합은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일부 지역 유지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그동안 한 사람이 학교를 바꿔 가며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입후보 자격이 없음에도 지역 위원으로 부적절하게 선출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참여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다. 지금까지는 학생 자녀를 두지 않은 지역 위원도 학운위 회장을 맡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높다. 학운위의 독립성과 자율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조례로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최현식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무상급식 및 무상교복 등 교육 이슈가 불거졌을 당시 시장·군수 및 의정들을 만나 설득하는 등 지역 위원들은 지역사회와 매개체 역할을 했다”며 “그동안의 성과와 긍정적 요인을 조례로 이를 막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2일 해당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원선영기자 haru@

강원도민일보

2023 04 11 ()
04

강원 학교운영위 협의회장은 ‘학부모’, 조례 개정안 논란

학부모위원 “이해 당사자 발언 제고”
지역위원 “회장선출 제한두면 안돼”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학부모’가 맡도록 하는 강원도 조례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학부모위원 측은 지역위원들의 정치화 등을 문제삼으며 ‘이해관계당사자’인 학부모의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위원들은 학교가 지역과 협력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회장 선출에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본지 취재결과, 오는 12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상정 예정인 강원도 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김희철 발의)을 두고 지역위원을 중심으로 개정안 반발의견이 상임위에 접수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 사항을 둘러싸고 학부모, 교원, 지역관계자 등이 위원들이 목소리를 내는 심의기구다. 개정안은 학부모위원을 협의회 회장으로 호선하되, 학부모위원이 없는 경우 위원 중 호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원의 임기를 기존 ‘2년·연임 가능’에서 ‘1년·1회 연임 가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같은 개정 배경에는 지역위원들이 학교운영위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운영위 권한을 지역 정치에 이용한다는 학부모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정우 춘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학교 운영위에 학부모위원은 없고, 지역위원들이 운영위를 장악해 지역 선거에 이용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최현식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은 “학부모는 당사자라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다”며 ‘불합리한 예산이용’ 등에 지적에 대해선 ‘회의에 필요한 예산 사용’을 했다”고 말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희철 의원은 “운영위 운영에 대해 500건이 넘는 감사위적발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조례는 지역위원의 회장 선출을 막은 게 아니다. 조례를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개정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 04 11 ()
01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지방시대의 선도적 구현!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강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강원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2023. 4. 11.~ 4. 25. (15일간)

-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청)
- 청소년도의회 운영
- 당면 안건 심의 처리 및 현지사찰 등

江原日報

2023 04 11 ()
01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지방시대의 선도적 구현!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강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강원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제318회 임시회 2023. 4. 11.~ 4. 25. (15일간)

-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도청)
- 청소년도의회 운영
- 당면 안건 심의 처리 및 현지사찰 등

강원도민일보

2023 04 11 ()
19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통과는 '국가의 책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기원 릴레이 기고

김길수 강원도의회강원특별자치도지원특위 위원장



강원도는 남북 대치의 접경지역,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 보호 구역, 산림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지리적 특성과 법률규정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1.3배(2만 1891km²)에 달하는 여러 규제와 제약을 받아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민들은 휴전 이후 70년간 그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특별한 희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생산기반의 취약으로 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국토의 17%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지역 총생산액(GRDP)은 전국 대비 2.5%에 머무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들이 오랫동안 정부에 호소하고 건의해 온 것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 세종, 전북, 경기북부 등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거나 요구하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다 음과 같은 아주 특별한 이유와 당위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생산기반이 취약하게 된 원인과 실태를 국가와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강원특별자치도는 여당과 야당이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인정

하여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시, 가장 중요한 핵심공약으로 함께 제시한 약속이며 법으로 명시한 '국가적 책무사항'입니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오랜 기간 제안하고 호소하여 추진하는 지역 자치분권의 최초 사례입니다.

넷째, 진정한 지역자치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의 관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강원도의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부처와 협의 및 국회에 제출된 법안 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강원도와 도민들이 가장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농업, 환경, 산림, 국방의 4대 규제해소가 핵심입니다. 강원도에서 당초 발굴한 500여건의 특례 중 국회와 사전 논의 결과 137건으로 축소된 법률 개정안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특례 분야로 담겨야 하는 재정 분야는 이번 개정 법률안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제주도가 2006년 1차 법률안 전부개정 시 재정특례를 비롯한 1062건의 권한 이양(6차에 걸쳐 4660건

개정)을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필요한 조직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고시급한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심공약이자 여·야가 경쟁적으로 제시했던 강원특별자치도의 추진, 그리고 정상적인 출범에 필요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전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정부의 각 부처와 국회가 지극히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4대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안에 난색을 표하고, 더 나아가 반대하는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10일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 3조(국가의 책무) 1항에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까지 두 달 남았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도민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제 300만 내외 강원도민의 요청에 국회와 중앙정부가 올바른 답을 할 차례입니다.

그 첫 시작이 바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또 하나의 법률을 심의하고 만드는 과정일 수 있지만 강원도민들에게는 100년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간절함이 담겨있는 법안입니다.

2023 04 10 ()

원주투데이

시민이 일궈 온 한지문화, 도약 위해 힘 모을 때

쌓아 올리는 건 어려워도 허무는 건 순식간이다...25년이란 긴 시간동안 시민이 주도해 왔던 한지문화가 도약의 발목을 잡히는 일련의 상황에 마음이 착잡하다.

박윤미 강원도의회 의원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원주의 문화예술계 소식은 우려스럽고 씁쓸하다. 문화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공동체를 복원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순기능이 원주에선 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있는 듯하다. 방만 운영, 보조금 집행지침 위반, 투자대비 비효율 등등의 이유로 줄줄이 민간위탁이 해지되고 사업이 중단되는 등 원주 문화예술의 잔혹사가 펼쳐지고 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업을 정상화하겠다는 원주시의 의지라고 읽히기보다는 정권교체에 따른 과도하게 더해진 정치적 색채로 느껴진다. 더욱이 최근 한지테마파크 전시체험관 건립이 무산되었다는 보도를 접한 후, 몇 년 전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시 담당 공무원들과 노력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2011년 문을 연 한지테마파크는 체험에 참여하는 방문객, 한지아카데미 수강생, 전시실 관람객들로 늘 북적인다. 하지만 외관의 화려함과 규모에 비해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는 항상 부족한 공간이다. 한지아카데미 등 연간 1만5천여 명의 시민이 한지문화 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지만, 그나마 강의실의 모양을 갖춘 것도 2018년이다. 1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강의실도 2개에 불과하다. 유아 기관의 체험 수업도 공간이 부족해 2층 회의실을 이용하고 있어 공모사업에선 매년 공간의 부족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한지테마파크는 전국 유일의 한지를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원주의 명소가 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외지에서 관광객이 원주를 방문할 때 꼭 들러가는 곳이고, 지역 주민들도 자랑스럽게 한지테마파크를 소개하기도 한다.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제2의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추진된 전시체험관 건립 비용은 도비가 70%를 차지하는 사업이다.

한지 전시체험관은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확장으로 시민 참여 공간을 확대하고 공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설계가 추진되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원주시는 건설 자체비 상승으로 도비가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와 협의도 없이 현재의 건물을 보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어떻게 확보된 국·도비 반납도 불가피해 보인다. 건축비 상승을 핑계로 시설 보수만 하겠다는 것은 본래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한지테마파크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치는 꼴이 돼버렸다.

언론 보도 대로 시설을 그냥 둔 채 단순히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터치형 전시체험관을 구축하는 것으로 진행에선 안 된다. 현재 건물의 부족한 콘텐츠를 신축하는 건물에 도입 후 본 건물의 용도를 재구성하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도비가 지원된 만큼 전시체험관은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당초 취지에 맞게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져야 한다.

많은 시민이 한지테마파크를 원주의 자랑스러운 여기는 것은 시민들의 힘으로 한지문화가 성장했기 때문이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시민주도로 축제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의 한지테마파크 건립 예산 확보에 앞장섰던 민간단체인 한지개발원의 노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한지테마파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런 가치 있는 시민성이 존중받기보다는 시정의 변화로 정치적 이해관계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깝다. 한지테마파크 위탁운영마저 원주문화재단으로 변경할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까지 있으니 이 문제를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은 비단 나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쌓아 올리는 건 어려워도 허무는 건 순식간의 일이다.

원주에 대표할 만한 문화 자산이 많지 않은 시점에 25년이란 긴 시간동안 시민이 주도해 왔던 한지문화가 도약의 발목을 잡히는 일련의 상황에 마음이 착잡하다. 민간주도형의 위·수탁 사업이 줄줄이 철회를 맞고 있는 원주 문화계의 소용돌이를 보면서 문화의 관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 간다.

박윤미 강원도의회 의원 wonjutoday@hanmail.net



동해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복순)는 10일 오후 천곡동 '감동해 행복빨래방' 건물 2층에서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동해시여협 천곡동에 새동지 “여성권의 신장”

사무실 이전 개소식

그동안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동해시여성단체협의회가 사무실을 천곡동으로 이전했다.

동해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최복순)는 10일 천곡동 '감동해 행복빨래방' 건물 2층에서 심규언 시장, 이동호 시의장, 유순옥 도의원, 협의회 역대회장·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실 이전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기존 시청 별관 사무실 임대기간이 만료되며 이전한 새 사무실은 총사업비 7000만 원을 투입해 60.71㎡ 규모로 리모델링이 이뤄졌다.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친목 도모를 위해 지난 1987년 4월 14일 창립된 시여협은 현재 15개 단체, 모두 840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시여협은 폭력예방·방지에 관한 홍보 캠페인을 시작으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 참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복순 동해시여협 회장은 “독립된 공간으로 이전 개소함으로써 좋은 환경에서 회원들의 화합과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전인수

江原日報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여야 한목소리

道·도국회의원협·강원일보 주최
강원특별법 개정지원 국회포럼

여야 지도부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일제히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는 10일 강원도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강원일보가 주최한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 국회포럼’에서 일제히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보상, 국회 차원의 신속한 협의와 통과를 언급했다. ▶관련기사 2·3면

오는 19일 국회의 본격적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포럼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행정과 정치의 핵심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 강원도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했기에 특별한 발전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께 할수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첫 외부 행사로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 국회포럼’에 참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원내대표로 있는 동안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들이 이번 기회에 싹 없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재명 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가 위해 희생한 강원 특별히 보상해야”
윤재옥 국힘 원내대표 “지역발전 막던 규제 이번엔 싹 없애자”
김진태 지사 “특별도 첫 단추 제대로 끼워야” ... 토론 등 이어져

주당 대표와는 사법시험 동기로 이번엔 강원특별자치도를 확실히 밀어줄 것 같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첫 국회 공식 일정을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해주셨다. 정말 감사하다”면서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아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시기다. (국회에서) 제대로 첫 단추를 끼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은 “오늘 강원도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강원일보사가 주최한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 포럼이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회장,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양수·송기현·유상범·허영·박정하·노용호·김두관·전준호·최연숙 국회의원,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 지도부와 강원도민들이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는 세리머

니를 펼친 이후 한영한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강호상 서울대 교수, 양철 강원연구원 연구원, 박재형 강원연구원 박사의 군사·환경·산업·농지 등 4대 규제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또 현진권 강원연구위원장을 좌장으로 김현호 한국지역개발학회장,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최병수(강원일보 전무이사) 강원특별자치도 자문위원, 윤준호 국회의원 보좌관의 토론이 진행됐다. 최기영기자

江原日報



“규제 철폐 약속 지키겠습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이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려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진오 강원일보 사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회장,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양수·송기현·유상범·허영·박정하·노용호·김두관·전준호·최연숙 국회의원,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촉구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박승선기자 lyano@kwnews.co.kr

2023 04 11 ()
02

江原日報

국회의원·지역정치권 “정파 떠나 함께 뛰자”

강원지역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한마음으로 결의했다.

10일 강원도·도국회의원협의회·강원일보 주최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 국회포럼’에서 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은 19일부터 국회의 심사를 받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은 “강원도 국회의원을 대표해 환경부, 산림청,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하나씩 토론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강원특별법이 통과됐지만 빈 껍데기법”이라며 “여야 의원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핵심 열쇠”라며 “저 역시 군사·산림·환경·농업 등 과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강원도에 산적한 거미줄 규제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회의원은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과 내실있는 발전을 바라는 강원도민의 기대가 담긴 법”이라면서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국가 균형발

여야 지도부 비롯 대거 참석 한마음 한뜻 소통·협력 결의

전의 선도 모델이라는 점에서 쉽지는 않지만 강한 의지로 정성을 다하겠다. 저 역시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현 국회의원은 “강원도 면적의 30%가 중복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규제가 강원도 지역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이 정파를 떠나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저 역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허영 국회의원 역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포럼을 열게 돼 더욱 뜻깊다”면서 “아직 정부 부처의 협조는 부족한 점이 많다. 정부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고 적극적인 국회 논의를 통해 출범 전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강원지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이날 포럼을 찾아 “지방자치가 30년

이 됐고 광역지방정부는 충분히 정부를 운영할 역량을 갖췄다. 가능하면 많은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면서 “국방부,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이 강원도의 특성을 고려해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강원지역 국회의원 외에 김두관·전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연숙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타 지역 국회의원도 참석해 강원특별법 개정에 힘을 보탰다.

서울=최기영·이하늘·정윤호기자



◇10일 국회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에서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와 (사)강원도민회중앙회가 강원특별법 조속 개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도민의 열망을 전달했다. 서울=박승선기자

“특별법 국회 조속 통과” 300만 도민 염원 외쳐

범추위·도민회중앙회

강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300만 강원도민의 절실한 마음이 국회포럼 현장에 모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붐업을 주도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이하 범추위)와 150만 출향도민을 대표하는 (사)강원도민회중앙회는 10일 포럼이 열린 국회 도서관 강당을 가득 채우며 도민 염원을 대변했다.

이날 김천수 (사)강원도민회중앙회장은 “강원특별법 개정에 온 마음을 집중해야 할 시기이지만 완벽한 성공은 출범 이후에도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뤄낼 수 있다”며 “출향

도민의 관심과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마음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범추위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인 고광만 춘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서명 운동을 전개하며 도민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붐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향후 순조로운 입법 절차를 통해 경제·기업 특례가 발굴되고 늘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금선 강원경제단체연합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앞에 놓인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도민들이 이해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당부했다. 전역찬 (사)강원경제인연합회장은 “수십년을 푸대접·무대접 속에 새겨진 도민들의 상처가 이물

수 있도록 강원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고 오늘 포럼이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배 범추위 집행위원은 “특별자치도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법안 통과를 놓고 도민 걱정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을 넘어 전 국민의 관심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했다. 박광구 도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자비로 버스를 대절해 범추위 위원들과 포럼 현장을 찾았다. 18개 시·군의회 의원들과 공직자들도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경청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맞춰 지역 발전을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다.

서울=이무현·정윤희·김오미기자

“특별자치시대 강원 발전 이어나지길”

내빈들 응원 메시지 줄이어

10일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이 열린 국회도서관 강당 입구에서 내빈과 참석자들이 화이트보드에 응원 문구를 남겨 눈길을 끌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특별법 개정 지원 의지가 담긴 문구가 이어졌다.

행사시간 40분 전에 도착한 김천수 강원도민회중앙회장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기원합니다’라는 글을 남겼고 뒤이어 수십명의 내빈과 참석자가 행사장 입장에 앞서 글을 남겼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새로운 강원도 특별자치시대 반드시 성공합니다’를, 권성동 강원도국회 의원협의회장은 ‘강원도의 새로운 도약’을, 유상범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완벽한 개정’을 화이트보드에 쓰며 의지를 표현했다.

특히 같은 시간대에 도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각각 ‘강원도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도약, 강원특별자치도’라는 글을 나란히 서서 적으면서 여야가 강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모습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사진 맨앞)이 10일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에 참석, 나란히 서서 응원 글을 남기고 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한 후 공식 행사에 처음 모습을 보였고 ‘강원도 사랑합니다’라는 글로 관심을 나타냈다.

화이트보드의 문구를 살펴보면 한 도민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때가 생각날 정도로 붐클했다”며 “부디 남은 2개월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준비가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이무현기자

江原日報

2023 04 11 ()
03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환경·군사 측면 규제로 피해
억울하지 않은 강원 만들어야”
과반의 힘으로 적극 지원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원도의 실효적인 특별한 발전을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민주당의 몫”이라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에 참석해 “제 정치의 가장 큰 원칙은 역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통해 어느 지역도 억울하지 않은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강원도는 환경적 측면에서 대한민국 최고를 자랑한다.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규제를 받게 됐고 온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박승선기자

국민을,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다”며 “또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다 보니 군사규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출발은 우리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당에서도 함께 해주셨지만 앞으로 이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갖는 실효적인 특별한 발전이 가능한 그런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민주당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국회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힘으로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에 힘을 싣고 있다. 또 “강원도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특별한 지원을 통해 그동안의 그 억울함도 해소하고 특별한 발전과 진전을 이뤄내는 계기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함께 힘쓰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이하늘기자

江原日報

2023 04 11 ()
03

“강원 발전 막는 규제 없애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치도법 미흡하단 여론 많아
임기 내 책임지고 본회의 통과”
여당의 힘으로 해결 노력 다짐

국민의힘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임기 동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에 참석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면밀히 살펴 여당의 힘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선거에서 선출된 후 첫 외부 행사로 이날 강원특별법 전문가 포럼에 참석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에 참석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박승선기자

했고 법안 통과에 대한 여당의 의지를 확인, 의미를 더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됐지만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발의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을 참고했을 때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국민의힘 소속인데다 권성동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철규 사무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이양수 농해수위 간사, 대선 때부터 함께했던 박정하, 노용호 국회의원 모두 우리 당”이라며 여당의 힘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강원도 국회의원들 한 분 한 분 모두와 가깝고 도움을 많이 주신다”며 “(제가) 원내대표로 있는 동안 책임지고 강원특별자치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빨리 법이 통과돼 강원도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들을 이번 기회에 싹 없애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이하늘기자2sky@kwnews.co.kr

2023 04 11 ()
03

江原日報

〈김진태 지사〉

〈이재명 대표〉

金 “연수원 동기” 인연 강조에 … 李 “함께 힘쓸 것” 미소로 화답

정치적 대립각 세웠던 두 정치인 ‘강원 발전’ 손 맞잡아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워 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한 뜻을 확인하고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 이어 최근까지도 서로의 문제를 지적해 오던 사이이지만 이날만큼은 악수를 나누면서 강원 발전의 뜻을 함께했다.

김진태 지사는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개정 지

원을 위한 전문가 국회포럼’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것을 두고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표님 이번 강원도 행사에 오신다고 예정돼 있으셨는데 정말로 오실 수 있으시나 염려했지만 정말 오셨다. 감사하다”며 “이렇게 직접 만나서 악수를 한 것은 1년이 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저와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서로 별로 사이가 안 좋은 것으로 아시는데 실은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밝히며 “다른 경로를 걸어왔지만 이번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밀어주실 것 같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장’을 맡아 국민의힘 자격수로 활동했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 같은 과거를 뒤로 하고 ‘강원특별자치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의 힘을 요청한 것이다. 그러자 내빈석에 앉아 있던 이재명



◇10일 국회포럼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가 김진태 강원도지사와의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표가 웃으면서 손 인사를 보내 화답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진태 지사가 고생이 많다”며 “김 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여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함께 힘쓰겠다”고 말하면서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대표 또한 지난해 레고랜

드발 금융위기 사태를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었다.

또 최근에는 ‘골프연습’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도 “김진태 도지사의 사후조치서는 허위 공문서 작성 아닌가”라며 “내가 그랬으면 압수수색을 당했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었다.

서울=이하늘기자

江原日報

2023 04 11 ()

03

‘자치도 지분 기싸움’ 강원 표심 끌어안기

이재명 “실효적 발전 민주당의 몫”
권성동 의원 핵심 역할 자처 견제
심사 소관하는 행안위로 이동 예고

2024년 4·10 국회의원 선거 총력
전을 앞둔 여야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의 ‘지분’을 강조하며 강원도 표
심 끌어안기에 나섰다.

이날 포럼에서 축사에 나선 이재
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별자치
도법은 민주당이 최선을 다했다”며
“실효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민주당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 다수 의석을 점한 국민의
힘도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

도국회의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도 적극적인 협조를 약
속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강원도 국회의원을 대표해 환경부,
산림청, 국방부 등 부처별 장관들과
1대1 면담을 하면서 토론을 하겠다”
고 핵심 역할을 자처했다.

이어 권 의원은 5월 말 상임위원
회 변경 소식을 알리면서 “현재 과
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데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심사를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리를 옮겨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강원도 국회의원 대부분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하며
“빨리 법이 통과돼 강원도 발전을 가
로막던 규제들을 이번 기회에 싹 없
애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서울=정운호·이하늘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4 11 ()
03

연 33명 찾는 '박정희 공관' 보수비 3억원 편성... 실효성 의문

연평균 방문객이 30여명에 불과한 양구 소재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공관에 보수비 3억원이 편성, 강원도의회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본지 취재 결과, 도는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공관 보수 지원' 사업 1억5000만 원을 편성했다. 강원도와 양구군이 각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강원도가 추진 근거로 삼은 것은 강원도 접경지역발전 지원 조례다. 사업 설명서에 명시된 사업 목적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5병사단장 재직 시 공관으로 이용한 공간을 보수해 접경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산 투입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방문자 현황을 보면, 공관의 총 방문객 수는 162명이다.

연평균 33명 꼴이다. △2018년 59명 △2019년 45명 △2020년 16명 △2021년 13명 △2022년 29명 등이다.

이에 양구군 관계자는 "시설이 노후화돼 있다 보니 2018년부터는 상시 개방을 못해서 방명록을 근거로 방문객 수를 확인한 것"이라며 "2017년 이전에는 연 1000명대 방문객이 찾았다. 시설이 노후화돼 안보관광 측면에서 도비를 요청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 공관 보수 지원 예산은 오는 14일 기획행정위에서 심의된다. 이설화

강원도민일보

2023 04 11 ()
07

강원도 동해안 관광지 중심 전기차 충전시설 2829기 구축

강원도가 동해안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해 관광객들이 충전 걱정 없이 여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역 특성과 연계한 전략적인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해 '제1차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120개를 선정해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1만5665기(강원 2829기)를 전국 곳곳에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속초 등 영동 주요 관광지의 공용주차장에, 도로공사 등은 영동·동해 고속도로에 이번 사업을 통한 충전시설 251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

환 브랜드 사업'은 지역 특성, 전기차 보급 여건 등을 연계해 지자체, 충전사업자, 자동차 제작사 등 다양한 사업 유형으로 충전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 지역은 이번 사업을 통해 2829기(106억원)를 구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사후관리단'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구축 상황을 공유하며 의견수렴 등을 위한 지역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석 kimhs86@kado.net

2023 04 11 ()
03

강원도민일보

강원 드론택시 사업 ‘공중 분해’된 70억원 환수 가능할까

총사업비 271억원 중 일부기 투입
강원TP 전담 민간기업 행사고소
해당업체 가치분 신청 이의 신청

속보=강원도가 혈세 낭비 논란이 증폭된 'UAM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에 대해 전방위 감사(본지 4월 7일자 2면) 진행과 함께 이 사업을 전담한 민간기업을 상대로 행사 고소와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투입된 예산 70억원 환수 방안을 놓고 민간기업의 사업 추진 과정과 예산 사용처 등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돼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강원테크노파크는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을 전담한 디스이즈엔지니어링(TIE)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 경기 성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다. 드론택시 사업 총사업비는 271억원(도비 221억원, 민간기업 자부담 50억원)이다.

2021년 3월 강원도, 강원테크노파크, TIE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시제기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TIE가 이 사업을 전담해왔다. 드론택시 시제기(시험용) 개발 사업에 70억원 규모가 투입됐지만 사업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수가 미달돼 이 사업은 지난 1월 전격 중단됐다.

문제는, 투입된 70억원 환수 여부다. 이와 관련, 도감사위와 강원테크노파크 등은 해당 업체의 예산 사용처 등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수령이 불발되면서 행사 고소를 통해 예산 환수 방안을 찾기로 했다. 계좌추적을 통한 잔고 증명 등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테크노파크는 해당 업체에 대해 추천지침에 집행정지 가치분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TIE는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추진 2년만에 중단된 드론택시 개발사업은 혈세·행정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강원도의회에선 민간기업에 221억원이라는 대규모 도비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안전장치, 강원도 이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강원도 차원의 보완 작업은 부재했다.

김경식 전 도의원은 2021년 6월 도정질의에서 "200억원정도를 신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실패해도 사업비에 대한 환수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게 굉장히 의아하다"며 "지난 5월 중소기업벤처부도 2021년도 하반기에 조성되는 강원뉴딜펀드를 통해서 업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지적했다.

드론택시 사업을 둘러싼 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 등이 예고되면서 강원공직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지은·이설화

江原日報

2023 04 11 ()
04

도교육청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실시

수산물·육류 등 17종 대상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학교 급식 식재료 점검에 나섰다.

강원도교육청은 10일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축수산물 17종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품목은 학교 급식에 많이 활용되는 오징어와 고등어, 임연수어, 갈치, 멸치 등 수산물 10종과 소고기·돼지고기, 표고버섯, 감자, 양파, 배추, 무 등이다.

이날 원주와 평창, 횡성교육지원

청 납품업체 3개소를 대상으로 시료 수거가 이뤄진 데 이어 1주일 간격으로 도내 17개 시·군교육지원청이 식재료 점검 및 검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적합 식재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 사용을 금지 조치한다.

학교 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는 2018년 ‘강원도교육청 학교 급식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해마다 이뤄지고 있다.

해당 검사에서 요오드와 세슘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문제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원선영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4 11 ()
04

도교육청 ‘추경 2500억원 규모’ 학력신장 중점

최종 예산 5조원 돌파 가능성

강원도교육청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2500억원으로 추산, 올해 최종예산 규모가 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도교육청의 올해 1회 추경 예산은 250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3015억원과 비교해 500억원 줄어든 금액이다.

도교육청은 추경안이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예산안 공개는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 교육계 현안인 학력신장과 국가시책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중점 사업인 학력향상과 국가시책인 디지털·AI

교육을 중점에 뒀다”라고 밝혔다.

올해 1회 추경 규모가 2500억원 안팎으로 전해지면서 강원도교육청의 2023년도 최종 예산 규모가 5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본 예산은 4조1400억원으로 이번 1회 추경을 합친 예산 규모는 4조4000억원이다. 앞으로 남은 2회·3회 추경을 통해 6000억원이 추가되면 5조원을 기록한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2회 추경액은 8146억원에 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는 세수여건이 좋아 추경 규모가 컸다”면서 “매년 변화가 많아 연도별 단순 금액 비교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했다. 도교육청은 예산안을 확정된 뒤 오는 5월 4일 의회에 1회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민엽

강원도민일보

2023 04 11 ()
14

정선군 농촌일손부족 해결 인력확보 총력

MOU체결·중개센터 설치 등

정선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투입 등 영농인력 지원으로 농촌일손부족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승인을 받고 지난 1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농업분야 교류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 농가고용 계절근로자 242명, 농협과 연계한 공공형 계절근로자 50명, 결혼이민자 초청 50명 등 총 342명을 농가에 배치할 계획이

다. 이 일환으로 최근 라오스 계절근로자 113명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 정선지역 31농가에 배치됐다. 2차 외국인 계절근로자 127명이 오는 5월 입국하면 77명은 24농가에 배치하고, 50명은 여량농협에서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에 배치해 부족한 농가일손을 돕는다.

군은 올해 여량농협에 농촌인력중개센터 1곳을 추가로 설치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었던 농가들에게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강원도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주현

江原日報

2023 04 11 ()
14

태백시 494억 투입 지역 하천 48개소 정비

2026년까지 순차적 시행

【태백】태백시가 494억원을 들여 지역 내 하천 48개소(지방 하천 4개소, 소하천 44개소)를 대상으로 순차적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태백시 시행 지방하천 재해예방공사의 경우 소도천 2개 지구는 총 사업비 235억원을 들여 3.9km 구간을 2025년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강원도 시행 철암천 2개 지구는 269억원을 투입해 7.8km

를 2026년까지 정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포함된 내량천, 방터골천 2개 하천은 지난해 12월 계약을 마무리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다. 창죽천, 원동천, 당골천은 6월 실시 설계완료 및 7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용역 중이다.

또 홍수기 전 하천 점검을 통해 위험이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점검 후 우기 전 보수 완료 대상지로는

정거리천, 절골2천, 지지리골천, 도릉천, 새마을천이 있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가 하천 정비의 최우선 목표라는 방침이다.

신정숙 시 안전과장은 “하천 정비 시 친수공간을 조성해 관광객과 주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위해 지역 내 하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다목적 쉼터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주민 여가에 활용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희기자

춘천시 민원콜센터 내년 3월 문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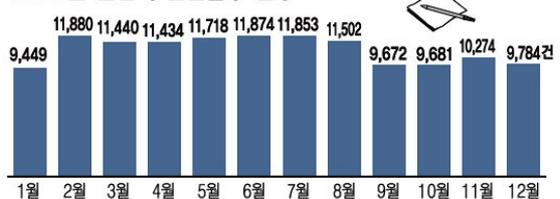
시의회 기획행정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결
시 본회의 통과시 별관에 인력 9명 개소 추진

【춘천】민원서비스 평가에서 최하위까지 추락했던 춘천시의 시민 민원 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김보건)는 시가 제출한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0일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는 7억5,000만여원을 투입해 내년 3월 시청 별관 3층에 상담인력 9명으로 구성된 춘천시 민원 콜센터를 개소

할 계획이다. 강원도 내에서 콜센터가 개소된 곳은 강릉시, 원주시, 정선군, 영월군 등 4개 시·군이고 전국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42곳이 운영 중이다. 춘천시 연간 민원접수는 지난해 13만567건으로 상담사 1인 일평균 처리건수가 235건이다. 이는 기존 민원 콜센터가 있는 원주시(92건), 강릉시(150건) 등에 비해 처리건수가 더 많은 수치다. 또 콜센터가 없어 전화교환원을 거쳐 담당

2022년 춘천시 민원접수 건수



자로 연결되면서 연결시간 지체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전화 돌림, 무응답, 불친절 등의 지적을 받아 왔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306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시는 2021년 최하위인 마등급을 받았으며 지난해에

는 두 단계 상승해 보통 수준인 다등급을 받았다.

이날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임시회에 종합행정 민원의 혁신방안 부족과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부결됐다 재상정된 해당 조례안이 시의회의 지적사항이 반영돼 원안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4 11 ()
02

고온·건조한 봄철 화재 전년비 23% 증가... 원주 56건 최다

3월1일~4월9일 총 319건 발생
춘천 51건·철원 31건·강릉 29건
영서지역 급증 동해안 예년 수준
평년보다 적은 강수량 원인 분석

각 지역 소방서 별 화재 건수
기간: 3.1~4.9 단위/건, 출처: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2022년 259건 >>> 2023년 319건

지역 2022년		2023년		지역 2022년		2023년	
춘천	38	51	영월	9	16		
원주	39	56	평창	16	13		
강릉	28	29	정선	7	8		
동해	5	8	철원	18	31		
태백	4	3	화천	6	10		
속초	13	8	양구	5	7		
삼척	8	16	인제	12	11		
홍천	21	25	고성	8	8		
횡성	14	14	양양	8	5		

강원지역 봄철 화재가 심상치 않다. 평년에 비해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지난 해에 비해 23%나 증가했다. 특히 춘천과 원주, 홍천, 철원 등 영서 지역 화재가 급증하고 동해안은 예년 수준에 그쳐 화재의 '서고동저(西高東低)'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지 취재 결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 9일까지 발생한 화재는 총

319건이다. 지난 해 같은 기간 259건에 비해 약 23.2% (60건) 늘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56건으로 제일 많았고 춘천이 51건, 철원 31건 등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부주의가 214건으로 제일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51건, 기계적 요

인 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10일 하루에만 도내 17건의 화재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오후 2시 54분쯤 춘천시 서면 금산리의 층간 층이던 전기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자체 진화를 하던 차주가 부상을 입었다. 앞선 오후 2시 17분쯤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의 신축 건물 공사장에서 용접작업 불티로 인해 불이나 3명이 구조되고 그중 1명 이다쳤다. 같은날 오후 1시 12분쯤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의 한 공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조립식 건물 495㎡중 92㎡가 소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담뱃불 부주의를 발화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봄철 화재는 강원도에 치명적이다. 최근 5년(2018~2022)간 강원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9722건이다. 그중

봄철(3~5월) 발생한 화재는 총 2912건으로 전체의 29.8%에 달한다. 재산피해의 경우 같은 기간 4087억원 중 2978억원이 봄철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이 같은 화재 증가가 건조한 날씨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강원기상청에 따르면 도내 평년 강수량(3월 1일~4월 10일 기준)은 64.1mm로 지난해는 이보다 많은 90.1mm의 비가 내렸지만 올해 44.6mm에 그치면서 마른 날씨가 지속됐다. 특히 강릉의 경우 올해 같은 기간 평균 강수량이 22.8mm로 평년 84.4mm에 비해 크게 적었다. 게다가 올해 같은 기간 평균 기온도 8.7도로 평년(5.2도)에 비해 더운 날씨를 보였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비해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쓰레기 소각이나 야외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한 작은 불씨가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11일 강원영서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로 비가 내리는 곳은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다. 더불 어 지난 9일 고비사막과 내동골고원에 서 발원한 황사가 이날 비와 섞여 내리겠고 비가 그친 후에는 한반도 전역에 영향을 끼치겠다.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영동지역은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할 전망이다. 11일 도내 아침 최저기온의 경우 영서 5~10도, 영동 14~17도, 낮 최고기온의 경우 영서 15~17도, 영동 18~23도로 예보했다. 김경호·신재훈

강원도민일보

2023 04 11 ()
/ 19

출범 코앞에 국무총리 앞장서라

-특별자치도 지원위 존재감 안보여, 서명운동 여론 들끓는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구체적인 권한 이양, 규제 개혁, 특례 등을 명시한 법안이 중앙정부 협의 과정에서 막혀있자 전면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번지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껍데기로 남을 것인가 진정성 있게 운영될 것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법 개정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범도민적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강원특별자치도 범국민추진협의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서명운동 참여자는 1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연일 강원도민일보 광고 캠페인을 통해 조기 입법을 촉구하는 개인 메시지가 다양하게 표출됨으로써 열기를 확산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사 규제가 심각한 화천군에서는 주말을 맞은 4월 8일 시장에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적극 진행해 강력한 의지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제출해 결단 촉구해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국가 차원의 안보 구축과 전력 제공, 용수 공급 등을 이유로 개발과 발전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신사업이 배정 육성되지도 않았고 교육 문화 교통 의료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도 뒤처짐으로써 발전이 아닌 낙후와 소외로 점철돼 왔습니다. 강원도민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자리와 재산권 행사 등에서 지속적 손실을 보았습니다. 국가 발전을 이유로 거미줄 규제를 가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에 대해 더 이상 용인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강원도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운영에 빈틈이 있어선 안 된다는 열망 또한 큼니다. 특별자치가 산업화 시대 때부터 안보와 전력 제공, 토지 이용 제한 등 국가 이익을 명분으로 삼아 중으로 얽은 차별적 정책을 중단하고 첨단 산업을 보완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절실히 바랍니다.

따라서 제자리걸음인 법 개정 사안을 풀려면 한덕수 총리가 위원장인 지원위원회 역할이 큼니다. 한 총리는 강원도를 찾아 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긍정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선언적 언사가 아닌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 특례 및 규제 개혁 수용,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책을 명문화하는 고도의 지방자치 실현 조치를 내놓아야 마땅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회피하는 안이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4 11 ()
/ 19

총선 1년 앞, 민심 살피는 계기로

-고물가 고금리에 생활고, 정쟁 대신 민생 챙겨야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상대당을 비난하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무역수지와 함께 경상수지까지 적자 행진을 거듭하는 와중에, 정치인들은 민생보다는 공천에만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지적입니다. 건강한 정책 대결은 찾아보기 어렵고, 상대방 헐뜯기식 비방전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의 최우선 순위는 민심을 살피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정치를 원하는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차기 총선은 집권 3년 차를 맞게 되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이자 차기 대선의 전초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충돌하며 강원도 정치권의 선거 열기가 조기에 점화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국정과 도정 권력이 모두 교체된 이후 치러지는 선거여서 여야는 물러섬 없는 한판 대결을 예고합니다. 이미 도내 선거구별로 치열한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선 1년을 앞두고 본지가 춘천·철

원·화천·양구 갑 선거구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의 부정 여론은 과반을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7%, 국민의힘 37.1%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3.6%p로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도·부동층은 16.8%(지지 정당 없음 15%·잘 모르겠다 1.8%)에 달해 중도층과 무당층을 겨냥한 여야의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김진태 도지사의 도정 수행 평가는 긍정 평가 34.5%, 부정 평가는 58.8%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설문 결과는 윤 정부와 김 도정이 정국 운영에 대해 속고하고 되돌아보라는 요구로 해석됩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현안과 공약을 더욱 꼼꼼하게 챙기라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여당에 대한 실망이 야당을 향한 전폭적인 지지로 이어지지 않은 점은, 정치권 신뢰 부족이 여전하다는 방증입니다. 극심한 여야 대결만 있을 뿐, 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먼저 바닥민심을 읽어야 합니다. 당면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국가 비전을 제시하느냐가 내년 총선 승패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총선 입지자, 지역·나라발전 위해 당당한 경쟁을

4년마다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 입장에서 냉혹한 승부의 세계이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공동체의 민주주의의 기운을 새로 창조하는 공간이다. 유권자의 힘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 온 대립과 분열의 정치를 바로 세워 새로운 희망을 심어 나가야 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내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이어 내년 총선까지 승리를 이어 가려는 여당과 국회 권력을 지키면서 차기 대선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야당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즉,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인 동시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라는 두 가지 프레임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10일 현재 내년 총선 주자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강원도 내 입지자는 52명이다. 2020년 선거에 비해 후보군이 줄었다. 국민의힘의 경우 중앙정권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며 활약하고 있는 도내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낸 이들을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잇단 선거 패배로 후보 자체가 예년보다 줄어든 분위기다. 내년 총선에 나서는 입지자들은 지역과 나라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가지고 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한국 정치는 그동안 민주화 이후 진보와 보수 정권이 교차하면서 이념적 갈등이 첨예화됐다. 정권 차원에서부터 사소한 정책 차원에 이르기까지 양 진영은 분열적 요소를 띠며 극한 투쟁을

벌이기 일쑤였다. 일부 국민은 스스로 '싸움터'에 나서기도 했으며 일반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보였다. 이제 다수의 국민은 이념적 갈등에 피로감을 느끼며 소모적인 이념 논쟁에 싫증을 내고 있다. 진보와 보수 정권을 다 경험한 국민은 중도실용주의적 정치 성향을 띠며 이념 갈등에 휘말리지 않을 지도자를 찾고 있다. 그 지도자는 이념적으로 단순히 중도적인 인사라기보다는 온정적이고 포용적인 보수이거나 온건하고 합리적인 진보 인사일 것이다. 국민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 경제를 살리고 지역과 나라 발전을 이끌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내년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1년 앞으로

도내 자천타천 거론 인사 52명, 물밑 움직임

경제 희생·일자리 창출 등 정책적 대안 제시를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역시 경제다. 과거에는 성장과 분배의 논쟁이 있어 왔다. 이제는 복지에 집중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그 해결책을 강구한다는 차원에서다. 세계 경제가 장기적 침체에 직면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초유의 불경기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쉽게 회복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 IMF 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 다수는 시급한 사안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열망하고 있다.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갈 수 없다면 성장이 먼저인 것은 자명하다. 총선 입지자들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성장 대책을 가지고 주민에 다가가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4 11 ()
/ 19

北 또 '핵 어뢰' 시험, 한미 정상 억제력 강화해야

북한이 최근 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또다시 강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7일 '해일-2형'이 1,000km 거리를 71시간6분간 잠항해 수중 기폭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해일의 수중 폭파 시험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북한의 핵 전력은 하루가 다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핵 어뢰뿐 아니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지상발사순항미사일(GLC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 시험에 이어 올 3월에는 전술 핵탄두 화산-31형까지 공개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대책이 논의되는 한미정상회담(26일)이 더욱 중요해졌다. 양국이 현재 준비 중인 공동 문안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비책과 세부 실행계획이 담길 수 있기를 바란다.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현재 핵심 현안인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막판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확장 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시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으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핵탄두를 직접 관리하지 만 나토 차원에서 핵 사용을 결정할 수 있고 미국이 발사코드를 입력하면 나토의 핵 배치국 공군이 적군에 투하하는 방식이다. 핵 억제를 위해서는 북측이 만약 핵을 사용할 경우 우리도 응징한다는 확실한 보복 의사와 능력이 필요한 때다. 이번에 확장 억제 강화 방안엔 한국 측의 역할이 명문화되면 실효적인 핵 억제가 가능하다.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다량화에 박차를 가했다. 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하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북한의 도발을 막아내려면 우리의 킬체인 등 3축 체계를 강화하고 핵우산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달에는 태양절(1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25일) 등 북한의 주요 기념일까지 예정돼 있어 김정은 정권이 다시 도발할 수 있다. 다행히 한미정상 회담을 앞두고 양국은 '확장 억제 실효성 강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나토식 핵 공유'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핵 전력 운용 과정에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기획·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 자산을 우리가 필요할 때 한반도에 적시에 전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대책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